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의 결성과 원수폭 금지운동

양동숙 _한양대학교

논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의 결성과 활동을 일본의 원수폭 금지 운동과 관련시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후 히로시마 조선인 피폭자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피폭자 구제’와 ‘핵무기 폐기’라는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맥락을 구명하는 것이다.

1975년 8월 2일, 재일 조선인 최초의 원폭 피해자 운동단체로 조직된 조피협의 결성 배경에는 1950~1970년대를 거치면서 보다 열악해진 조선인의 삶과 변화와 일본 사회의 강한 배외주의, 그리고 1955년 이후 히로시마에서 고조된 원수폭 금지운동과 1960~1970년대 손진두 수첩재판을 통해 각성된 일본 시민단체의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가해성의 자각이 있었다.

조피협은 결성 후 피폭자 구조와 핵무기 폐기라는 원수폭 금지운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전쟁 책임을 물으며 조선인 피폭자의 실태를 밝혀 조선인 피폭자 운동을 처음으로 전 세계 반핵·평화운동 안에 자리매김했다. 또한 일본과 국교가 없다는 이유에서 어떠한 피폭자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피폭자의 원호 문제까지 포괄하며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DOI: <http://dx.doi.org/10.31008/MV.38.5>

조피협¹⁾의 활동은 전후 일본의 다양한 법적 제약 하에서 작동되던 조선인 피폭자 실천 구조의 난제를 폭로하는 동시에 그것을 전 세계 시민과 함께 원수폭 금지운동으로 해결해가며 민주주의의 성과를 수호한 활동이었다. 또한 “어떠한 나라”의 핵무기도 거부한다는 원수폭 금지 운동의 원칙을 조선인 피폭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지킨 활동이었다.

■ **주요어:**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 원수폭 금지 운동, 재일 조선인 원폭 피해자, 북한 원폭 피해자, 이실근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협의회(広島県朝鮮人被爆者協議會 이하 조피협)’의 결성과 활동을 일본의 원수폭 금지운동과 관련시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후 히로시마 조선인 원폭 피해자¹⁾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피폭자 구제’와 ‘핵무기 폐기’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맥락을 구명하고자 한다. 조피협은 이실근(조피협 초대 회장)의 주도로 1975년 8

-
- 1) 한국에서는 ‘원폭 피해자’와 ‘피폭자’를 구분, ‘원폭 피해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원폭투하를 둘러싼 국가 간 책임 문제와 관계된다. ‘피폭자’는 직접 원폭 피해를 입은 사람만을 일컫고, ‘원폭 피해자’는 직접 피해만이 아니라 간접 피해를 입은 유족과 2·3세대 포함시키는 용어다. 유족 보상과 2·3세 원호책을 생각하면, 원폭 피해자 용어가 적절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피폭자를 원폭 피해자의 의미를 담아 함께 사용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월 2일 결성된다. 이실근은 1950년대 일본공산당과 함께 한국전쟁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던 중 구속되어 8년을 옥중에서 보냈다. 그사이 한반도와 일본의 정치 상황은 크게 변한다. 한국전쟁은 1953년에 정전되지만 한반도는 남북분단 상태로 고착되고, 일본에서는 1955년에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조선총련)'가 창립되어 '재일본 조선인 연맹(이하 조련)'·'재일 조선통일 민주전선(이하 민전)'시대에 일본 공산당 아래서 일본인과 함께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한 조선인의 다수가 일본공산당을 탈당, 조선 총련에 가입했다.

또한 1954년 비키니 수폭 피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일거에 반핵운동이 고양되는데, 그 결과 '일본 원수폭 금지 협의회(이하 일본 원수협)'가 성립됐다. 하지만 미일 안전보장 조약과 소련 핵실험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쟁점차로 1960년대 초 원수폭 금지 운동은 분열되고 만다. 공산당계의 '원수폭 금지 일본 협의회(이하 원수협)'와 사회당계의 '원수폭 금지 일본 국민회의(이하 원수금)' 2개의 대중 단체로 분립됐다. 냉전체제 하에서 반핵·평화운동의 고뇌는 깊었다.

그래도 1960년대의 일본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원수폭 금지운동과 피폭자 원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은 한국전쟁 후 무수한 전쟁 피해자·부상자가 속출했고, 한미 정부의 핵 안보 전략을 기초로 한 무관용 반공 국가체제가 구축된 시기로 원폭 피해는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일본은 1960년대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반전·평화운동도 고조되었고 한일기본조약을 계기로 출입국 관리 체제 반대 운동, 재일 조선인 차별 철폐 운동 같은 다양한 사회운

동이 고양됐다.

조피협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결성됐다. 오늘날 ‘피폭자 건강 수첩 (이하 원폭 수첩)’²⁾을 취득하면 누구라도 피해자 건강 수당, 의료비 등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 정부의 틀 안에 있는 자만이 인정된다. 곧 일본 정부는 전쟁 피해자 전체에게는 수인(受忍)을 요구하고, 유일하게 원폭 피해자만 예외로 만들어 원호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특수한 피해자로 피폭을 특권화해 이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게 만들어, 역사의 망각을 부추기고, 역사의 진실을 봉쇄시키는 작용의 효과를 보려한 일본의 정치가 그 배경에 있었다.

조피협은 이런 일본 원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 전개된 일련의 손진두 ‘수첩 재판’³⁾을 지원하며, ‘피폭자 구제’, ‘핵무기 폐기’

-
- 2) 1945년의 원폭 피해를 당한 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근거해 교부된 수첩으로, 자격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조건은 ① 직접 피폭자 ② 입시 피폭자(폭심지로부터 2Km 권내에 있었던 자) ③ 사체 처리 및 구호를 행한 자 ④ 1, 2, 3의 해당자의 태이다. 수첩 취득으로 얻을 수 있는 지원은 의료특별수당, 특별수당, 원자폭탄 소두증수당, 건강관리수당, 보험수당, 간호수당, 장례금 등의 수당이다. 그리고 지정·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원폭수첩 등을 제시하면 전액 국비 혹은 자기부담분을 부담하지 않고 진찰받을 수 있다. 재외 피폭자에게는 국적을 묻지 않고 피폭자 건강수첩이 교부되지만 수첩 보유자는 2015년 3월 시점, 약 4,400명에 불과하고, 게다가 현재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 거주 피폭자에게는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를 목표로 하는 원수폭 금지운동을 전개해갔다. 또한 일본의 식민 지배·전쟁 책임을 일관되게 묻고 조선인 피폭자만이 아닌, 재외 피폭자 전체, 그리고 피폭자만이 아닌 동아시아 전쟁 피해자 전체와의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조피협의를 운동을 전 세계 핵무기 반대·평화운동 내에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이렇듯 조피협의 활동은 한국 원폭 피해자 운동과 평화 운동에 하나의 성찰점을 던져준다.

조선인 피폭자 연구는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시간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한일 정부를 상대로 운동을 전개해온 조선인 피폭자, 또 이를 지원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운동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축적해왔다(梁東淑 2015, 76-81).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원폭 피해자의 실태 조사와 수첩 교부를 둘러싼 행정 조치의 차별 시정을 위한 소송 중심으로 연구가 제한되어왔다. 최근에서야 일본의 피폭자 원호 행정이 상징하는 ‘히바쿠샤(피폭자)’의 범주에 한국 원

-
- 3) 1945년 8월 피폭됐으나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원폭 피해자 손진두는 1970년 12월 원폭 치료를 위해 3번째 밀항을 시도, 일본에 입국해 8년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는다. 1972년 3월 피폭자 건강수첩 교부를 요구하며 후쿠오카현 지사에 행정소송을 제소하는데 1, 2심 모두 승소한다. 1978년 3월 최고재판소는 후쿠오카현의 상고를 기각, 원폭 피해는 특수한 전쟁 피해로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며, 원폭의료법은 국가 보상적 배려가 제도의 근간이므로 손진두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후 외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라도 일본을 방문하면 법의 적용을 받아 피폭자 건강수첩이 교부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일본 정부로부터 피폭자로 법적 인정받은 대표적 사건으로 일본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존재를 알린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폭 피해자가 어떻게 편입됐는가를 구조적인 시각에서 고찰한 한국 원폭 피해자 운동사 연구(오은정 2013)가 개시됐다. 그리고 기존 연구가 주목하지 못한 손진두 수첩재판 과정을 1960~1970년대 일본의 사회운동사 속에서 고찰해 한국 원폭 피해자 운동사의 지평을 새롭게 넓혀준 심층 연구도 나왔다(김원 2017). 하지만 아직까지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조선인 원폭 피해자 운동사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합천과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의 증언자료 및 실태조사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조피협 연구는 앞으로 한국 원폭 피해자운동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보강이 꼭 필요하다.

그동안 역사적 사실조차 제대로 정리된 바 없던 본 연구 주제를 위해, 히로시마 지역신문, 조피협의 간행물과 자료들, 그리고 원수협·원수금 관련 간행물, 그 외 히로시마 조선총련의 출판물과 연표 등의 자료를 활용했다.

2. 조피협의 결성 배경

1) 전후 히로시마의 초기 평화운동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세계 평화운동은 큰 변화를 겪는다. 유례없는 전쟁 참화의 경험, 특히 핵무기의 출현은 세계인의 평화 유지, 확보에 대한 관심과 결의를 촉발시켰다. 하지만 미소 냉전으로 전쟁 위

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평화운동은 대중적인 사회운동으로 또 다시 전개됐다. 패전 직후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일본의 완전 비무장이 아닌 재군비 쪽으로 방침을 크게 전환했다. 초기 평화운동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형태로 등장했고, 일본공산당계의 ‘평화위원회’와 사회당계의 ‘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이하 총평)’ 등이 그 중심 단체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평화운동에 ‘적색’ 공격을 가했다. 또한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전까지 미 점령군이 지배한 히로시마에서는 원폭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어, 평화운동 내 원폭 피해와 피폭자 문제는 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水本和美 2005, 164; 荒川恵子, 2008, 597-599).

1949년 ‘평화 옹호 히로시마대회’가 개최되어 ‘원자폭탄의 폐기’가 호소되기도 했지만, 원폭 주제의 평화운동은 일부에 한정됐다(水本和美 2005, 165). 원폭 반대 평화운동은 오히려 ‘평화 옹호 세계대회(1949년 2월, 파리와 프라하 개최)’처럼 해외에서 시작됐고 이에 호응해 도쿄에서 ‘평화 옹호 일본 대회(1949년 4월)’가 열렸다. 세계대회는 이후 ‘세계평화평의회’의 설립, 일본대회는 ‘평화를 지키는 모임(平和を守る会 → 후에 일본 평화위원회)’의 발족으로 이어졌고, 이로부터 전후 일본의 평화운동은 시작됐다(藤原修 2014, 89-99). 이들 평화운동은 전후 냉전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이 고조될 때, 동서양을 연결해, 세계의 긴장 완화를 도모하거나 비국교 수립 사회주의국과 교류하는 대화창구로 기능했다(藤原修 1991, 47). 평화 옹호 세계대회 상임위원회는 이듬해인 1950년 3월 15~19일, 세계대회 개최 중 발표한 ‘스톡홀름 어필’로 ‘원자 무기의 절대금지’를

주창했다. 이 호소에 전 세계인 5억여 명, 일본 시민 645만 명이 지지·서명했다(日本平和委員會 編 1969, 395). 이렇듯 핵무기 반대 평화운동은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고조되다 그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는 195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전후 히로시마 초기 평화운동에 조선인은 ‘조국 방위’를 내걸며 공산당의 무장투쟁에 동참하는 형태로 참여한다. 1945년 11월 ‘조련’ 히로시마 지부가 결성되는데(『広島同胞愛國運動의 발자취』 刊行期成会 2000, 12), 이들은 일본의 재군비 방지 및 조선인의 생존권 확보 등을 외치며 일본인과 함께 싸웠다. 그런데 ‘단체등규정령(団体等規正令 1949)’으로 조련, ‘재일본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이 해산되자, 해산을 면한 여성동맹이 조련 활동의 거점 역할을 맡는다. ‘생활 방위와 평화 옹호’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동맹은 일본공산당과 함께 평화운동을 전개했고, 조련의 강제해산 후에도 활동을 지속했다(ひろしま女性学研究所 2016, 139).

한국전쟁 발발 후 조선인은 ‘민전’을 재조직하고 동시에 ‘조국방위위원회’와 산하 실천 부대인 ‘조국방위대’를 결성했다. 이들은 합법 대중운동과 ‘무장혁명’ 노선을 취한 일본공산당과 공동으로 한반도로의 무기수송과 군수물자의 생산 저지를 위한 이른바 ‘화염병 투쟁’ 등을 전개했다. 훗날 조피협 건설을 주도한 이실근을 위시한 조선인도 조국방위대 일원으로 화염병 투쟁(1952.2.17, 3.1, 3.13, 4.29, 5.3) 등을 주도하다 구속된다. 이에 히로시마 조선인이 저항하며, 법정에 구속된 이들을 탈취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1952.5.13)이 발생하기도 했다(広島県警察部編 1955, 886-893). 민전은 피폭자를 포함한 조선인의 생존권 옹호도 여전히 중요

과제로 다뤘고, 민족교육 운동도 히로시마 남서부에 위치한 오타케시(大竹市)를 중심으로 전개했다(阪上史子 2016, 69-74; ‘サンナムル’ 編集委員会 2000).

그런데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로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은 명백한 외국인으로 규정된다. 이를 계기로 외국인인 조선인이 왜 일본에 거주하는가라는 역사는 더 이상 일본인에게 의식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조선인의 일본 내 정치활동 및 생존권 운동은 내정 간섭이라는 인식을 일본 사회에 확산시켜 조선인에 대한 배외주의를 강화시키는 데로 연결됐다(도노무라 마사루 2010, 477~480). 특히 중핵 자위대 사건⁴⁾ 이후로 재일 조선인은 경계를 흐리는 존재이자, 일본공산당과 북한을 배후로 해서 ‘폭력’을 일본 내부로 유입시키는 ‘헌법=전후’ 공간의 침입자,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따라서 본국으로 ‘송환’해 일본으로부터 분절시켜내야만 하는 존재로 간주됐다. 전후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은 ‘좌익=폭력’이라는 표상에 극단적 배제 논리가

4) 패전 후 미 점령군의 ‘적색’ 공격으로 일본공산당은 탄압을 받는데, 이에 공산당은 점령하 연합군을 ‘해방군’으로 평가하고 ‘평화혁명론’을 취했던 자신의 노선을 반미 무장투쟁 방침으로 전환했다. 1951년 지방에는 산촌공작대, 도시에는 중핵자위대 등의 무장대를 만들어 미군기지, 경찰서, 법원 등을 습격하는 등 무장투쟁을 감행하는데, 대표적 사건으로는 1952년 1월 삿포로의 시라토리 가즈오(白鳥一雄) 경감 사살 사건, 도쿄의 오메선(青梅線)의 화차 폭주 사건, 도쿄 오가와 우치무라(小河内村)의 산촌 공작대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때 재일 조선인도 일본공산당과 함께 미군정에 맞서 싸웠다. 이를 통칭 ‘중핵 자위대 사건’이라 한다.

더해지는 양상을 띠었다(서동주 2015, 281-282).

한편 미국의 아이젠하워 정부는 1954년 1월 ‘대량 보복 전략’을 발표하고 태평양에서 수폭실험을 반복하기 시작하는데, 1954년 3월 1일 마셜군도 비키니 환초에서 실시한 수소폭탄 실험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제5후쿠류마루의 선원 23명이 피폭되고, 반년 후 세계 최초로 수폭에 의한 한 명의 사망자마저 발생하자 미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고조됐다. 또한 일본 정부마저 미국에게 원폭 실험 중지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의 ‘대미 일변도’ 태도에 일본 사회 내 비판이 고조되어, 1954년 5월부터 각지에서 원수폭 금지운동이 확산됐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된 서명운동은 운동의 전국적 확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日本平和委員會編 1969, 97; 小林良江 2013, 115-118).

1954~1955년 전개된 원수폭 금지 서명운동은 1950년 스톡홀름 어필 지지 서명운동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였다.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조직화된 힘과 지방조직의 적극적 참여는 1950년 서명운동에는 보이지 않던 특징이었다(宇吹曉 1982, 219-223). 서명이 확대되는 와중에 ‘원수폭 금지 서명운동 전국협의회(1954.8.8)’가 만들어졌다. 서명의 총수는 이듬해 195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의 첫날인 8월 3일까지의 합계 인원이 약 3,158만 3,123명이었다. 이는 당시 유권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였다. 또한 1955년 7월 9일 미국에서 핵군축을 요구하는 ‘러셀·아인슈타인 선언’이 발표됐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핵무기 반대 운동은 점차 고조되어갔다(水本和美 2005, 166-167). 하지만 1954~1955

년 원수폭 금지 서명운동의 최초 목표는 ‘수폭 금지’였을 뿐 히로시마·나가사키가 겪은 ‘원폭’은 목표에 포함되지 않았고 나중에 ‘원’이라는 글자가 더해져 ‘원수폭 금지’가 됐다. 이 사실이 보여주듯 히로시마 피폭자는 정작 세계 최초의 피폭자인 자신들이 피해자로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데서 소외감을 느꼈다.

2) 히로시마 조선인의 원폭 피해

히로시마 피폭자가 충분한 구제 미비로 소외감을 느낄 때, 그에서마저 소외된 피폭자가 존재했다. 원폭 피해 구제와 배·보상의 대상자는 일본 국적을 지닌 피해자로 한정됐다. 일본 원수폭 금지운동은 피해자 중심의 운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식민주의 전쟁이나 아시아는 들어설 틈이 없었고 반대로 재일 조선인을 비롯한 재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공존했다(市場淳子 2003, 53). 1970년대 ‘손진두 사건’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 히라오카 다카시(平岡敬)는 전후 일본이 ‘유일 피폭국’이라는 입장에서 세계를 향해 평화를 호소했지만, 다수의 조선인이 피폭당한 사실을 전후 일관되게 묵살했고, 피폭자 구제를 주요 목표로 삼았던 일본 원수폭 금지운동에서조차 운동 출발 시부터 그들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平岡敬 1983, 50-56). 이처럼 전후 일본인은 식민지주의 전쟁과 아시아를 망각한 채,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재량권의 확대인 출입국 관리체제에 무지한 채, 조선인이 겪는 일상적 차별에 무감각해져갔다. 훗날 1969년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될

때, 조선인 피폭자를 지원하는 일본인 단체 회원이 자신들에게 조차 그것은 낯선 법률이자 제도였다고 말하는데(김원 2017, 291-292), 법률과 제도 외부에 존재했던 조선인 피폭자의 처지의 일단을 가늠케 한다.

법률과 제도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추방당했지만, 조선인 피폭자는 히로시마에 거주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원폭 피해 전 히로시마에는 식민지 시기 강제 연행되어온 조선인이 다수를 점했다. 그들은 조선에서 주로 농업에 종사했던 자가 다수였고 일본어를 할 수 없었으며,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해 취업에 제약이 많았다. 주로 일용 노동이나 잡역 등 육체노동이나 일본인이 혐오하는 일에 다수가 종사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유했다(市場淳子 2003, 273-308). 강제연행으로 온 사람들은 원폭 투하 때, 폭심지로부터 좀 떨어진 장소에 있었지만 구출 작업, 사체 처리 등으로 시내로 들어와 피폭 당한 경우가 많았고, 히로시마는 특히 ‘건물 소개’ 작업으로 조선인 노동자가 시내 중심가로 투입되었기 때문에 직접 피폭의 피해도 많았다(대일항쟁강동위 2011, 39-44). 피폭 직후 치료 면에서도 조선인은 불리한 점이 많았다. 조선인 다수는 시외에 친족이 없어서 피폭 후 일단 시외로 피신해도 체재할 장소가 없어 다시 시내로 들어왔는데, 이때 잔류 방사능과 검은 비에 노출되어 더욱 피해가 컸다. 피폭 후 충분한 안정과 영양을 취하지 못한 점도 이후 건강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피난소에 가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충분한 조치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던 사례 역시 다수 찾을 수 있다(申達啓서 1993, 7; 広島県朝被協編 1979, 10-235).

조선인은 특히 히로시마 시내에서 모두 폭심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

의 특정한 지역에 함께 모여 살았다. 이런 특징은 나중에 원폭 수첩의 차별적 교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첩 취득을 위해서는 일본인 증인이 필요한데, 일본인과 분리되어 거주하고 그들과 사귀는 경우도 적었던 조선인에게 그것을 증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히로시마 조선인 실업대책 사업 노동자 17명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그들 중 피폭자가 아닌 사람은 2명뿐이었다. 그들의 약 50%가 조선인이었고, 조선인 중 80%는 피폭자였다고 한다(朱碩 1990, 71). 그런데도 조선인은 법으로 규정된 원폭 수첩과 의료 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몇 번이나 시 당국을 찾아가 호소해도 무시가 일반적이었고 일용노동자인 실업 대책 사업 노동자의 특성상 그들에게 시를 방문하는 일은 하루치 급료의 포기를 의미했다. 또한 ‘실업대책 노동자 수첩’을 지니면 의료비의 자기부담을 면제해줘서 굳이 원폭 수첩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 젊은이 사이에서는 ‘내가 지금 건강한데, 수첩 때문에 일부러 머리 숙여 비굴해져야 하는가’라는 분위기마저 팽배해 수첩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本田邦広 1971, 87).

한편 히로시마 피폭 조선인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는 총 피해자 5만 명 중 사망자를 3만 명(1972년 4월), 민단 히로시마현 지부는 총 피해자 3만 5,000명 중 사망자를 2만 7,000~2만 8,000명(上原敏子 1972, 13), 조피협은 피해자 4만 8,000명 중 사망자를 3만 명(広島県朝被協編 1979, 12)으로 추산했다. 그런데 히로시마시는 피폭 직후 조선인 사망자 수를 약 5,000~8,000명이라 추정했다(広島市・長崎市原爆災害誌編集委員会編 1979). 조선인 피폭자

단체들과 히로시마시의 견해의 차는 컸다. 2017년 8월 1일, 조피협을 포함한 조선인 피폭자 지원 3개 단체는 공동으로, 히로시마 시민국에 공식적으로 조선인 피폭자 수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그 결과 2017년 9월 22일 히로시마시 시민국 국제평화 추진부에서 답변서를 보내왔다. 시는 『히로시마시·나가사키시의 원폭 피해(広島市・長崎市の原爆災害)』(広島県朝被協編 1979)를 근거로 지금까지 일본인 피폭자 수가 14만 $\pm$ 1만 명이며, 그중 피폭 직후 한반도 출신자 원폭 피해 사망자 수를 5,000~8,000 명이라 공식 발표했다. 그 수는 1945년 8월 6일 원폭 투하 직후부터 11월까지 히로시마시의 거리별 추정 사망률을 적용한 수지만, 근거 자료가 소략하다고 했다. 또한 한반도로부터 징용된 인원수 파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내무성 보안국 통계에 따른 1944년 히로시마현 조선인 수 8만 1,863명, 히로시마현 경찰 통계에 따른 1945년 종전 직후 조선인 수 6만 명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조선인 피폭자 단체는 그 차인 2만 1,863명을 원폭 사망자라 추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양 수치는 계산 방법이 다르며, 또한 1944~1945년 종전 직후까지 원폭 투하만이 아니라 구레(呉)시와 후쿠야마(福山)시 공습으로 현 내에 다수의 전쟁 피해 사망자가 발생해서 현 외로 이동하는 사람도 많았으므로 그 차이 모두를 원폭 사망자 수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松嶋博孝 2017).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자, 사망자 수의 문제는 이처럼 현재까지도 조선인 피폭자 및 지원 단체와 시 당국 간 인식차가 커서 피해자 및 사망자 추산을 위한 논증 방법은 더욱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표 1〉 히로시마현 조선인 인구 추이(1945~1964)

연도	1945	1946	1947	1959	1964
인구 수	84,886	24,392	20,484	17,248	14,406

자료: 中國新聞(1946/7/17), 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団(1984) 참조.

〈표 1〉을 보면 1945~1947년, 2년 동안 히로시마의 조선인 인구가 급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폭 피해 생존자는 1946년까지 고국으로 귀환했고, 1946년 여름 이후의 귀환은 저조했다. 히로시마에서 피폭자의 인구학적 조사는 1946년 8월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조사된 피폭자 수에 이미 귀환한 피폭자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1945년 히로시마현 조선인 인구수는 피폭자 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당시 생존 조선인 인구는 약 6만 명으로 추측된다. 그중 1946년 3월까지 약 3만 5,000명이 귀환하고 남은 2만 5,000명 중 귀환 희망자는 약 2만 명이었다(1946.3.18. 후생성 조사). 히로시마는 조선인 귀환자 수송 계획을 발표하지만, 현 내 귀환 희망자 약 2만 명 중 계획 송환기간(1946.4.~1946.12.) 중의 실제 귀환자는 약 6,000명에 불과했다. 원폭으로 전 재산을 상실하고, 생활의 일부를 일본에 구축했으므로 귀환 후 생계 안정에 대한 염려, 게다가 한반도의 정세 불안 등의 조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후 1947년 5월에 실시된 ‘외국인 등록령’으로 조선인의 밀입국은 강제송환 대상이 됐다. 1948~1949년에 걸쳐 히로시마시 밀입국자는 382명, 그중 체포자는 18명이었다. 그리고 귀환업무도 한국전쟁 발발로 중지됐다. 귀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조선인은 히로시마에 그대로 거주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상실의 비율은 증가했다. 1950년 히로시마 조선인의 직업별 인구 수를 보면, 무직이 60%를 넘었다(在日本大韓民国居留民団 1984, 47-50). 전후 일본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어간 데 비해, 조선인과 일본인의 권리·생활 조건의 격차는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갔다.

3) 원수폭 금지운동과 복송(귀국)사업

비키니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원수폭 금지운동이 전개됐고, 피폭자가 조명받기 시작했다. 195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제 1차 원수폭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일본 최초의 민중 주도의 평화운동 대회였다. 비로소 피폭자가 전면에 등장해 피폭의 실정과 고난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미·소·중 등 총 14개국 52명의 해외대표와 7명의 북한 대표를 포함해 2,000여 명이 대회에 참가했다(『広島同胞愛國運動の 발자취』 刊行期成会 2000, 24).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평화운동의 과제로 ‘피폭자의 구제’가 거론됐다(水本和美 2005, 167). 또한 일반시민 다수가 이 대회를 계기로 원수폭 금지운동, 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원수폭 금지운동은 그 후 매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세계대회를 개최했고, 1954~1955년 서명에 담긴 시민의 염원을 모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준비회’와 ‘원수폭 금지 서명운동 전국협의회’를 통합해, 상설 조직 ‘일본 원수협(1955.9.19)’을 결성했다. 그리고 이듬해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협의회(1956.8.9, 이하 일본 피단협)’가 결성됐다(藤原修 2014, 89-99; 小林良江 2013, 113-123). 이렇게 비키니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원수폭 금

지운동은 전후 미·소를 중심으로 한 두 군사 블록이 대립하고 핵 군비 경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핵전쟁 저지, 핵무기 전면금지, 피폭자 원호연대’라는 세 가지 기본 목표를 내걸고, 서명, 평화 행진, 비키니 데이와 세계대회 개최 등을 조직해 대규모 대중시민운동으로 발전해갔다. 특히 1960년대 베트남 침략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일본 원수협은 ‘베트남을 제2의 히로시마·나가사키로 만들지 마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전 세계 반전·평화운동과 연대해 활동해갔다.

한편 동 시기 미·소는 기존 자신의 핵보유 특권은 유지하되, 뒤따르던 국가의 핵 보유의 길은 봉쇄시키려고 복잡하게 움직였다. 1963년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PTBT, 이하 부분적 핵정조약)’, 1970년 발효된 ‘핵비확산조약(NPT)’ 등이 그것이다. 또한 1960년대 소련의 평화운동은 일본의 평화운동에게 ‘부분적 핵정조약’의 지지를 강제했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원수금 세계대회가 분열하는 불행한 사건도 일어났다. 소련의 핵실험을 두고 사회당은 “어떠한 나라”의 핵실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산당은 “어떠한 나라”의 핵실험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은 원수폭 금지운동의 기본 전제다. 하지만 핵실험은 세계 정치와 별개로 독립해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침략 전쟁 도발이 목적인 핵실험·핵무기의 개발과 그렇지 않은 것은 확실히 구별되어야 하며, 미·소의 핵실험을 동일한 기준에서 취급하는 일은 옳바르지 않다고 보았다. 소련의 핵실험에 대한 이견은 소련의 부분적 핵정조약 평가와도 연동됐다. 사회당계는 부분적 핵정조약을 전면적 핵실험 금지 조약으로의 일보로 평가했다. 하지만 공산당은 그것이 미·소 강대국의 핵 독점을 의

미하며, 당시 중국의 핵실험을 견제하려는 중국 적대시 정책의 소산이라 비판했다. 또한 전면적 핵실험 금지가 아닌 부분적 핵실험 정지는 언제라도 실험 재개가 가능하다는 부분적 핵정조약을 비판했다. 공산당은 중·소 양국의 핵실험을 모두 비판하게 된 1970년대 전반 이전까지는 적어도 중국의 핵실험 및 핵보유를 지지했다. 이런 사회당·공산당의 입장은 그대로 원수폭 금지운동 내부에도 반영되어, 운동은 분열되어갔다(藤原修 2010, 95-100; 荒川恵子 2008, 617-645; 安部一成 1963, 58-63).

분열 과정은 우선 1955년 세계대회 직후 발족한 일본 원수협이 이듬해 1956년 제2차 세계대회부터 공산당계 주도로 활동이 전개되자, 이에 반발한 자민당계 조직이 제5차대회(1959)부터 참가를 중단한 데서 출발했다. 또한 민사당계는 1961년 ‘핵무기 금지 평화건설 국민회의’(이하 핵금회의)를 설립하고 단독 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본 원수협과 분리됐다. 또한 총평·사회당계도 1962년 원수금 세계대회 기간 중 실시된 소련의 핵실험에 대해 대회 측이 소련에 항의하지 않는다고 하자, 세계대회에서 퇴장하고 이듬해 1963년 세계대회를 보이콧해버렸다. 그리고 1964년 히로시마·나가사키·시즈오카, 세 피폭지의 일본 원수협(三県連)이 ‘원수금 운동을 위한 피폭지로부터의 호소’를 발표해, 공산당을 비판하고, “어떠한 나라”의 핵실험도 반대하며, 부분 핵정조약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그들은 일본 원수협(교토)과는 별도로 세계대회를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개최하고, 이어 ‘원수폭 금지 일본국민회의’(1965.2, 이하 원수금)를 결성한다. 이로써 원수협=공산당계, 원수금=사회당계의 분열은 확고해졌다. 훗날 1977~1985년 기간 통일대회를 함께 열지만 원수금의

뿌리 깊은 반‘공산당=원수협’ 감정은 원수금이 탈원전 운동을 조직했음에도 자신의 사상과도 어긋나는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내건 핵금회와 세계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藤原修 2010, 95-100; 荒川恵子 2008, 617-645). 원수폭 금지운동의 분열은 이후 많은 후과를 남기지만, 평화운동의 존재 이유와 자세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평화운동 참여자에게 제기한 일본 평화운동의 깊은 고뇌가 담긴 문제였다.

이 시기 재일 조선인 사회는 큰 변화에 직면하는데, 1954년 8월 30일 북한 남일 외무상이 ‘대일성명(이하 1954년 성명)’을 발표, 재일 조선인을 북한의 ‘국민’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일본공산당의 재일 조선인 운동에 대한 지도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의미였다. 이듬해 1955년 2월 25일 북한은 최초로 일본에 공식적 국교정상화를 제안하는 ‘대일 관계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성명(이하 남일 성명)’을 발표한다. 그리고 재일 조선인은 ‘조선총련(1955.5.25)’을 결성했다. 이렇게 ‘1954년 성명’으로부터 ‘1955년 남일 성명’에 이르는 기간, 재일 조선인 운동 내 운동노선의 변화와 주도 세력의 교체, 그리고 조선총련의 결성이 이루어졌다. 히로시마에서도 조선총련 지부가 1955년 8월 6일 결성됐다(広島同胞愛国運動의 발자취 刊行期成会 2000, 12). 이후 히로시마 조선총련 지부는 독자적인 ‘대일 인민외교’ 망을 구축·실행하고자 한 북한 지도 아래서 오무라 수용소 해체,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을 조직하고, 조선인의 집단적 귀국사업인 ‘북송’에 매진하게 된다(박정진 2011, 236).

재일 조선인의 귀국사업, 북송은 캄보디아 협정에 의해 1959년 12월부터 시행되었고 1984년 7월까지 단속적으로 지속됐다. 특히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시기에는 10만 명 규모가 집단적으로 귀국하는데 이는 ‘적대동맹국’으로부터 ‘비출신지’로의 이동이었다(박정진 2011, 230). 히로시마현 조선인도 1952~1962년 귀국 사업 때 총 28회 북송에, 총인원 2,048명(남=1,078, 여=980), 총 521세대가 집단적으로 북송했다(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帰国者名簿 1959~1962). 이런 이례적 성격을 갖는 북한의 귀국 사업의 실시 배경에 관해서는 현재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하지만 냉전 구조 속에서 이동의 자유가 없던 조선인에게 북송은 제한된 정보 하에서 수행된 ‘강요된’ 선택의 결과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인도적 측면에서 봐도 대량 귀국 실현을 위해 과잉 선전·기획으로 정치적 목표를 부과한 듯한 북한과 조선총련의 ‘대일 인민외교의 정치적 과잉 추진’(박정진 2011, 241)은 귀국사업 평가에서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 북송은 반공·반일정책을 취한 채일 조선인을 동포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채일 조선인의 탈출구를 봉쇄한 한국 정부의 ‘기민’, 또한 국내 골칫덩어리를 추방하는 듯이 했던 일본 정부의 ‘배제’, 그리고 그 ‘기민과 배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북한의 해외 동원운동’(李泳采 2010, 60)이었고, 10만 명의 ‘민족대이동’으로 이산의 역사를 낳은 슬픈 냉전 외교의 산물이었다.

3. 조피협 의 결성과 활동

1) 조피협 의 결성

전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피폭자의 존재를 조명한 일본 원수폭 금지 운동은 이렇게 불과 10년 만에 완전히 분열, 정체되고 만다. 초기 평화 운동에서 일본공산당과 함께 평화운동에 참여했던 히로시마 조선인들도 1955년 이후 조선총련이 결성되면서 집단적 귀국사업으로 피폭자 문제의 해결을 해소해갔다. 하지만 초기 원수폭 금지운동의 자발적 대중 시민운동으로서의 풍부한 자산은 이후 여러 원수폭 금지운동 단체로 계승됐다. 히로시마에서는 원수폭 금지운동 단체 이외의 피폭자 운동, 저널리즘, 학교, 지자체 등에서 초기 평화운동의 유산이 계승되어 일본의 비핵정책과 평화 문화를 지탱하게 된다(中達啓示 1993, 11; 水本和美 2005, 168-170).

이 시기 평화운동의 다양성 배경에는 베트남 반전운동, 미 원자력 잠수함 기항 반대운동, 1970년 안보투쟁, 오키나와 반환 문제 혹은 반원전 운동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가 있었다. 특히 평화운동이 정체되는 가운데 베트남 반전운동을 계기로 조직된 탈주병 지원 단체,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ベトナムに平和を! 市民連合, 이하 베헤렌)’은 다양한 시민을 조직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주도한 시민운동은 베트남전쟁 종결 후에도 지역 평화운동으로 계승되어갔다(藤原修 2014, 90-94). 그런데 베헤렌의 탈영병 지원운동은 한국인 김동희 망명에 대한 지원활동에서 보이

듯, ‘국가를 넘어서는 개인’이라는 이념 원리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국적 및 협정 등과 같은 법적 제약 하에서 작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결국 베헤렌 운동은 평화운동의 실천이 국경이나 평화헌법 하에서 국적 같은 법에 의해 제약되는 난제를 드러냈다(권혁태 2012, 101). 김동희 망명에 대한 지원 활동은 이후 평화운동가에게 이런 난제를 인식시키며 평화운동을 고조시키는 변화의 계기가 됐고 동시에 ‘일본도 전쟁에 휘말린다’는 ‘피해자론’ 대신에 일본의 ‘가해자론’이 제기되는 계기도 됐다. 곧 미국의 베트남 개입 자체에 대한 비판, 또한 이런 미국에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일본 정부의 ‘가해’에 대한 비판이었다. 일본의 ‘가해자론’이 제기되면서, 서서히 ‘전후 민주주의가 사상(捨象)했던 존재들’도 부상되기 시작했다(김원 2017, 263). 그리고 베헤렌의 평화운동은 식민지배라는 과거를 직시하고, 시민으로서의 자기책임을 자각하도록 일본의 평화운동에게 조선인 피폭자 및 재일 조선인 문제를 다시 상기·환기시켜준 사회적 배경이 됐다.

히로시마에서 1970년대 손진두 사건과 조우한 시민들이 조선인 피폭자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연대를 보내며 8년간 재판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시대적 배경이라서 가능했다. 손진두 재판의 지원 과정에서 일본 시민은 과거 식민지배의 피해자들과 만나면서, 식민주의·전쟁 책임, 그리고 출입국 관리체제, 재일 조선인 차별 등에 대해 강한 감수성을 지니게 됐으며, 식민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과 과거 식민지배 가해에 대한 속죄 의식을 지니게 됐다(김원 2017, 256-258). 일본에서 이 무렵 조선인 피폭자의 곤경과 집단 거주지를 환기하는 기사와

글들이 여러 잡지에 실리고(本田邦広 1971; 中島竜美 1974; 荒木誠之 1975; 上原敏子 1978),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조선인 피폭자의 인터뷰가 책으로 출간되는(朴寿南 1973) 등 조선인 피폭자에 대한 관심이 한국보다 더 많이 현상된 배경도 그런 시대 상황의 영향 탓이었다.

여기서 히로시마 ‘원폭 슬럼’에 대해 부연하자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일본의 도시부 하천가에는 많은 거주지가 있었다. 그곳에는 판자촌이 즐비했고, ‘불법 점용·불법 점거·슬럼’이라 불렸다. 그러나 전후 부흥과 도시화 진전 과정에서 이런 지구는 소멸해갔다(本岡拓哉 2012, 25). 히로시마에서도 오타강(太田川) 하천변 모토마치(基町) 아이오이도리(相生通り)는 조선인 피폭자와 조선인 거주구가 겹치는 곳으로 ‘토테몬(土手もん)’이라 차별적으로 불리던 장소였다. 통칭 ‘원폭 슬럼’이라 불렸던 이 원폭 부락에 1967년 총거주자 3,015명이 살았고 그중 조선인은 37%, 1,117명이었다. 히로시마 시내 거주 조선인의 1/6이 이곳에 집중해 살았다. 수차례의 화재로 수많은 조선인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모토오카(本岡拓哉)는 히로시마의 아사히바시(旭橋) 하류지구가 형성될 때 보도된 당시 신문 기사를 분석하는데, ‘위생’의 관점 하에서 쓰인 쓰레기 처리 기사 대부분이 행정 문제가 아닌 거주자 개인의 위생 관념으로 지적됐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그것은 거주자의 ‘반사회성’과 연결되어, 거주자의 ‘폭력성’ 운운하는 보도 양태로 이어졌다. 결국 열악한 환경의 원인은 하천변에 거주하는 거주자 자신의 문제라는 식의 논조로 연결됐다(本岡拓哉 2012, 34-37). 이런 보도 양식이 조선인에게 불법 점거

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하나의 장치로 작용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모토마치 원폭 부락의 조선인은 낮에는 실업 대책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민족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받으며(太陽 1965/11, 128),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갔다. ‘히로시마의 전후(戰後)’라 불리며, 전후 조선인 피폭자의 고단한 삶의 단면을 잘 보여줬던 모토마치 아이오이 도리는 하지만 1968년부터 재개발이 논의되다 1977년 가을, 고층아파트가 완공되면서, 결국 조선인 집락의 역사를 상실하고 만다(上原敏子 1978, 175-179).

바로 이런 시대 상황에서 조선인 피폭자는 일본 원수폭 금지운동 단체 및 피폭자 지원단체의 지지에 힘입어 ‘조피협’을 1975년 8월 2일 결성한다(中国新聞 1975/08/03; 広島県朝被協編 1979). 조피협 결성을 주도한 이 실근은 일본인만이 유일한 피폭자라는 세론 탓에 망각된 “골짜기의 피폭자”, 조선인 피폭자를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고자 원수협·원수금 등 원수폭 금지운동 단체의 지지 속에서 조피협을 결성한다고 자서전에 썼다(李実根 2006, 162-163).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조선인 피폭자 지원 시민단체는 시민회를 제외하면, ‘핵금회의’, ‘재한 피폭자 도일 치료 히로시마위원회’ 등 대부분 비정치적 성격의 단체가 중심이어서 조선인 피폭자 문제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지식과 이해는 제한됐다(申達啓示 1993, 30). 이제 비로소 ‘핵무기 정책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한다’는 정치적 성격을 분명히 하며 130명의 조선인 피폭자는 함께 모여 조피협 결성대회(1975.8.2)를 열었다. 한반도를 향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 발언에 대한 항의문과 조선인이 포함된 피폭자 원

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했다(中国新聞 1975/08/02). 초대회장은 이실근이 추대됐다. 부회장은 오봉수, 백창기, 김수현(사무국장 겸), 이사는 신복수, 정수조였다(中国新聞 1975/08/03).

그리고 4년 후인 1979년 4월 29일, 피폭자 2세로 구성된 ‘히로시마현 조선인 피폭 2세 협의회(이하 2세회)’(80명)가 조피협회의 자매단체 격으로 결성됐다. ‘피폭 체험, 전쟁 체험을 계승하고 세계평화에 공헌한다’는 취지로 4월 결성식을 갖는데, 이는 최초의 외국인 피폭자 2세회였다. 대회에서 2세회는 ‘피폭의 실상과 후유증을 널리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핵과 전쟁에 반대하며 세계 평화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공헌한다’는 선언을 채택했다. 초대회장은 백한영, 부회장은 강상열, 김수광, 신상수, 사무국장은 오광황이 맡았다(中国新聞 1979/04/30).

현재는 2012년 9월 8일 조피협 총회에서 확정된 임원이 이어져오고 있다. 당시 선출된 임원으로 회장은 이실근, 부회장은 이현백, 양수남, 이사장 김진호, 부이사장 강주태, 이사는 김필순, 심수길, 이영일, 여세진이다(広島県朝鮮人被爆者協議会 2015).

2) 원폭 피해자 원호와 실태조사

1960년대 중엽에 분열한 원수금 운동은 1977년 ‘원수금’과 ‘원수협’의 통일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개최로 이어진다. 이때 두 단체는 원수폭 금지운동의 과제를 ‘피폭자 원호’와 ‘핵무기 전면 금지’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두 단체는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적어도 운동 목표에 대해서는

공동된 인식을 지녔고 조피협도 이를 공유했다. 조피협의 활동을 이 두 목표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겠다.

우선, ‘피폭자 원호’와 관련된 활동을 보겠다. 원호는 피폭자의 의료 지원 실시를 위해 제정된 ‘원폭 의료법’(1957)과 피폭자의 모든 수당 지급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원폭 특별조치법(1968)’으로 구체화됐다. 이후 두 가지 법률이 일체화된 ‘피폭자 원호법(1995)’이 제정된다. 피폭자 원호법은 재외 피폭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이었지만, 각종 수당은 일본 국내에 없으면 지급될 수 없었다. 또한 피폭자 원호법의 성격과 관련, 사회보장이 아닌 국가배상 차원의 구제를 원하는 요구로 재판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⁵⁾

- 5) 피폭자 원호법의 성격과 관련, 피해자 구제에는 ‘국가보상’과 ‘사회보장’의 두 법체계가 있다. 국가보상은 피해발생의 원인이 국가에 있는 경우며, 사회보장은 국가에 있지 않는 경우다. 게다가 ‘광의의 국가보상’은 ‘국가배상’과 ‘협의의 국가보상’으로 나뉜다. 국가배상은 국가의 위법행위로 피해당한 경우며 보상 범위도 전체 손해에 해당된다. 협의의 국가보상은 국가의 적법행위로 피해당한 경우며 보상은 피해에 상당한 보상이면 족하다. 이처럼 피폭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는 ① 국가배상 ② 결과책임에 근거한 국가보상 ③ 사회보장, 3가지가 있다. ①은 샌프란시스코조약 제 19조 a항에 의해 피폭자의 대미배상청구권을 피폭자의 허락 없이 국가가 포기한 특수 사정이 포함되므로, 국가의 위법행위에 의한 피해로 국가원호는 배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에서 주장된다. 대부분의 피폭자 단체와 피폭자 지원단체가 지지하는 논리다. ②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대미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동 조약으로 미국에 대한 일본국의 배상의무가 충당됐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에서 주장된다. 따라서 국가의 적법행위에 의한 피해라는 것이다. ③은 피해 발생의 원인이 국가에 없다는 입장인데 공식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드물어 설득력이 없다. 원폭

히로시마에서는 손진두 사건 재판이 1978년, 8년 만에 최고재판에서 승소하면서 매듭지어진다. 이 8년 동안 일본 시민단체가 요구한 내용은 우선 그의 건강 정밀 진단 조사 및 치료와 보석의 요구였다. 그리고 수첩 재판, 강제 퇴거처분 무효 재판과 관련해서는 첫째, 원폭의료법이 사회보장장과 국가배상 중 어느 성격에 기초해 있는가를 규명하고, 둘째, 수첩 교부가 밀입국이 아닌 적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류 조건을

피해를 초래한 직접의 가해행위는 미국의 원폭투하 행위다. 한편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투하는 미일 양국 간 전쟁상태 안에서 발생했다. 전쟁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다. 일본 정부가 개시·수행한 교전행위는 원폭 피해를 가져온 원인이다. 게다가 원폭 피해를 시작으로 일본 국민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전쟁은 침략 전쟁이었다. 정부가 침략 전쟁을 개시·수행하고 막대한 희생을 강요한 책임은 지극히 중대하다. 전쟁 개시·수행의 책임이 적법이나 위법이나를 따지는 문제와 별도로 이 중대한 전쟁 피해가 정부의 행위에 의해 발생했고 수행된 이상, 일본 국민에 대해 ② 결과책임으로서의 국가보상 책임은 발생한다. 그런데 ①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원폭 재판에서 원고, 변호단은 국가의 법적책임의 근거를 피폭자의 허락 없이 대미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데서 찾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국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배상청구권을 포기했기에 그것을 시작으로 국가에 책임이 생긴다면, 국가는 배상청구권 포기 전까지의 상황에서는 피폭자에 대한 구체책임이 없게 된다. 이는 피폭 직후부터 점령 하에서 피폭자가 가장 고통한 시기, 곧 국가 원조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국가의 원조, 구조를 전혀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해주게 된다. 또 실제 피폭자가 가장 고통해야 했던 시기에 국가가 피폭자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 비정한 국가 정책에 법적으로 비난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①의 논리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 간의 기본 관계를 물어야 한다. 국가와 법적 책임구조를 재검토해야만 하는 이유다(椎名麻紗枝 1985, 159-177).

필수로 전제해야 하는가를 묻는 법적 요구였다. 곧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가의 여부와 출입국 관리체제의 반인권적 성격을 둘러싼 문제였다(김원 2017, 278). 출입국 관리체제에 근거한 강제퇴거 명령을 무효화시켜 국가와 법적 구조의 모순, 곧 전후 평화헌법 및 민주주의 체제의 한계를 폭로해주는 성격도 띠었던 것이다.

손진두 재판 이전 일본 평화운동 및 피폭자 운동에서 가해성 및 전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장시간 성찰되지 못했다. 초기 원수폭 금지운동에서 이 문제가 자각된 적은 있었다. 1958년 제4회 원수금 세계대회에서 나가사키의 피폭자 와타나베 치즈코(渡辺千鶴子)는 중국에게 핵무기를 겨누는 일본의 윤리적 문제성을 비판했다. 하지만 와타나베의 발언도 일본의 핵무장 문제라는 맥락에서 언급됐을 뿐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를 평화운동의 주요 의제로 성립시키지는 못했다(藤原修 2014, 94-95). 그 문제가 본격화된 시점은 1970~1975년 사이로, 시민회의 손진두 수첩재판과 강제 퇴거처분 무효재판 투쟁에서부터였다. 시민회 및 지원 단체는 손진두를 통해 전쟁책임·식민지배의 역사적 책임을 고발하고자 했다.

이런 시민회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던 조피협은 조직 결성 후 시민회를 포함해 원수금·원수협·피단협 등의 단체와 교류하고 일본의 가해성과 전쟁책임·식민주의를 고발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시민회 활동에 응대해갔다. 조직 결성 후 먼저 식민지 시기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전시 체제 시기 강제 연행된 노동자의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일본인 교사 20명과 함께 히로시마현 북쪽의 고보댐 건설에 동원되어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에 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경상남도 등에서 징용된 약 2,000명

의 조선인 노동자 중 수십 명이 가혹한 강제노동으로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다(中国新聞 1975/11/07).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료집을 출간했다(県北の現代史を調べる会編 1989). 또한 고보댐 추모비 건립운동을 주도해 1995년 추모비도 세웠다. 현재까지도 일본 시민단체, 주민, 학생들과 함께 매년 위령제를 합동으로 거행하고 있다.

이어 본격적인 피폭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975년 조선인 피폭자 279세대의 생활상태 조사를 거행해, 반수를 상회하는 153세대가 실업대책 사업과 생활보호 등으로 생활하며, 대부분 생활과 건강에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中国新聞 1975/11/07). 조피협과 히로시마대학, 원수금실행위원회 등의 공동조사로 히로시마 시내에 거주하는 한국적 포함 조선인 피폭자 1,900명 중 208명과 그중 2명의 일본인 처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이 조사명부 원본(広島県朝鮮人被爆者協議会 1978)은 현재 남아 있다. 조사기간은 1977년 6월 1일~1978년 8월 31일, 조사동원 수는 300명을 넘었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1978년 9월 13일 발표됐다(李夷根 1978, 9-16; 中国新聞 1978/09/14; 広島・長崎朝鮮人被爆者實態調査團 1979, 6-32).

조사 결과, 총대상자 중 50%의 피폭자가 고령화와 질병으로 힘들게 생활하며 실업대책이나 토목에 종사했다. 또한 총대상자 중 80%가 미국도 원폭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일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압도적 다수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와 조선인 강제연행, 불법 침략전쟁이라 적었다. 또한 총대상자의 59.6%가 부상이나 화상을 당했고, 48.5%는 경제적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

었다. 총대상자의 63%가 병이 갖고, 72%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총대상자의 85%가 경상남북도로부터 집단적으로 연행되었으며, 82%가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도일해온 사람이었다. 히로시마 조선인 피폭자의 치료실태 및 차별문제는 피폭 후 그들의 생존조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피폭 실태조사에 근거해 조피협은 피해자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1976년 11월 조선인 피폭자 16명의 원폭 수첩 신청(中国新聞 1976/11/28) 및 12월 수첩교부(中国新聞 1976/12/23), 이듬해 30명 이상의 조선인의 피폭자수첩 취득(中国新聞 1977/12/01)으로 이어졌다. 이실근도 1978년 5월 18일 수첩을 취득한다(中国新聞 1978/05/18). 그런데 1978년 3월 히로시마시의 손달수(孫達秀) 부부는 원폭으로 사망한 조선인 유가족에게 ‘전몰자 원호법’을 적용해달라고 ‘전상병자·전몰자 유족원호법’에 근거한 유족급여금 신청서를 제출하지만 조선인은 적용 제외라고 거절당했다. 이에 손달수 부부는 이의신청을 냈고(中国新聞 1978/03/05; 1978/03/07; 1979/03/20; 1979/03/27), 조피협은 이들을 지원하며 조선인 피폭자에 대한 원호 강화를 호소하는데, 최초의 조선인 피폭자 전국 집회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해(中国新聞 1980/07/15), 연좌농성까지 벌이기도 했다(中国新聞 1980/12/17).

한편 조피협은 종래의 통계적 피해 보고의 피폭자 증언 서술과는 차원이 다른 『하얀 저고리의 피폭자(白いチョゴリの被爆者)』(1979)를 출간했다. 출판 과정에서 히로시마 시민사회 단체 및 저널리스트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았다. 조선인의 식민 체험·민족 차별의 역사를 피폭 체험과 관련시켜 일본 제국주의 비판을 명시한 증언집으로 일본 피폭자

운동 내에서도 큰 조명을 받았다. 이어 1981년 7월 ‘피폭 조선·한국인 백서’ 작성을 위한 ‘백서편집위원회’를 설치하고(中国新聞 1981/07/04) 백서 및 증언채록 사업을 전개해나갔다. 1999년에는 현 내 조선인 1세의 체험담 수집을 위해 증언수집 위원회까지 구성하려 계획했지만(中国新聞 1999/04/22), 진척을 이루지는 못했다. 히로시마는 나가사키와 달리 1970년대부터 체험담을 조사해왔지만, 현재까지 종합적인 1세의 체험담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조피협은 ‘피폭자 대표로부터 요망을 듣는 모임’에도 참여했다. 이 모임은 1972년 야마다 노리오(山田範男) 히로시마 시장이 피폭자 8단체에게 ‘피폭자 문제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꾸러졌다. 조피협은 1977년 후지다(藤田) 총무장관과 6단체 피폭자 대표가 모였을 때 최초로 참석한다(被爆者代表から要望を聞く会會議錄 1977~2005). 그리고 이듬해 조선인을 포함해 외국인 피폭자 전체의 권리를 위해 이 모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히로시마현과 시에 요청한다(中国新聞 1978/08/02). 요청이 수락되어 조피협은 1979년부터 정식으로 현재까지 30년 이상 매년 8월 6일 모임에 참가하고 있다. 1985년 8월 6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은 피폭자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피폭자의 호소를 들을 때마다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전쟁 중, 일본이 한반도에 폐를 끼쳤으므로 피폭대책을 위해 가능한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직 수상 최초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표명하게 만든 것이다(中国新聞 1985/08/06). 회의록에서 나타나는 조피협 요망의 특징은 한국 원폭 피해자만이 아닌 북한 피폭자를 포함해 재외 피폭자 전체의 문제를 해결 과제로 제기하고

핵무기 폐기 등 평화운동에 관한 이슈를 일본 정부에 제기한다는 점이
다(被爆者代表から要望を聞く会會議録 1977~2005).

3) 핵무기 폐기와 평화운동

원수폭 금지운동의 또 다른 과제인 ‘핵무기 전면 금지’와 관련한 조피협 의 활동을 살펴보겠다. 히로시마·나가사키는 인류 절멸이라는 핵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고, 그 후 30년 동안, 미·소에 이어 영·프·중·인도 등도 핵보유국이 됐다. 또한 잠재적 핵보유국도 확대되어갔다. 실감할 수 없는 다각도의 대량 핵무기 개발로 세계는 자멸의 길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 전면 금지’는 국제 연대의 문제로 인식되어 히로시마의 평화운동은 1978년과 1982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제1회 및 제2회 군축 특별총회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핵무기 전면 금지’라는 목표는 이후 ‘핵무기 폐기’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UN 제1회 군축 특별총회에 참석 전인 1977년 7월 31일 도쿄·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는 UN 비정부조직(NGO)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원폭 피해의 실상과 피폭자 실태, 그리고 핵무기에 의한 참상을 UN을 통해 널리 세계에 알리고 세계 각국의 시민과 연대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목적에서 개최됐다. ‘국제 준비 위원회’는 노벨상 수상자를 회장으로 ‘국제평화 뷰로’, ‘국제평화 부인연맹’ 등 40개국의 NGO에 의해 1977년 발족됐다(栗原貞子 1978, 153-164). 조피협은 조선인 원폭 피해 실태조사로 피폭자의 실상이 분명해졌으므로 이를 근거로 국제사회

에서 핵무기 폐기와 피폭자 원호의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NGO 주최, 피폭 문제 국제 심포지엄에 이실근과 백창기가 대표로 참석한다(李実根 1978, 3-8).

이미 조피협은 조직 결성 직후부터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히로시마~구레 해상 시위를 전개하는 등 반핵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1976년 8월에는 원수금·원수협 세계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해 조선인 피폭자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과 미국의 원폭 투하로 희생당한 이종의 전쟁 희생자’라며 세계를 향해 호소했다. 1976년 10월에는 ‘이종의 전쟁 희생자’라는 사실과 ‘핵무기 금지’라는 평화 호소를 UN과 145개국의 각 UN 대사에게 보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中国新聞 1976/07/23).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한 조피협은 ‘피폭자와의 간담회’ 세션에서 조선인 피폭자의 실태, 특히 차별과 방치 사실을 발표해 국제적인 지지를 받았다(李実根 1978, 3-8). 참가한 일본 대표자조차 조선인 피폭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당시, 조선인 피폭자 문제가 처음으로 국제적인 장에서 발신된 것이다. 이후 히로시마 시민사회에서는 국제 심포지엄만이 아닌, 1977년 개최될 UN 군축 특별총회도 조피협이 일본 대표단과 함께 참석해 ‘조선인 피폭자의 존재와 피폭의 실상’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되었다. 전후 일본 정부의 일관된 조선인 차별정책으로 조선인의 해외여행의 자유가 엄격히 제약받던 상황이어서 재입국 허가의 전망이 불투명한 조피협의 참가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안 히로시마의 학자, 문화인, 저널리스트 사이에서 ‘조선인 피폭자의

UN 방문을 꼭 성사시켜 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그 결과 10일 동안 모인 500여 명의 서명을 일본 관계 관청과 미국 대사관에 보내는 청원운동이 전개됐다(日本ジャーナリスト会議広島支部編集委員会 1978, 40). 전후 역사를 통해 조선인 피폭자를 둘러싼 조일 친선의 폭넓은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이 열린 셈이었다. 이렇게 전후 제일 조선인으로는 최초로 미국 비자를 받아 이실근은 뉴욕의 UN 본부를 방문한다. 1978년 5월 UN 군축 특별총회, ‘핵무기 완전 금지를 요청하는 일본 국민대표단’의 읍저버 자격이었다.

총회는 5월 23일~7월 30일 동안 개최되었다. 당시 일본국민대표단 500명은 히로시마 등에서 100만 명 서명운동과 대표단 발족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1회 군축 특별총회에는 1,800명, 제2회 군축 특별총회에는 2,370명의 핵 폐기 청원서명이 제출됐다. 또한 제2회 총회를 앞두고는 국내의 약 1,000개의 자치단체 의회가 ‘비핵결의’를 수행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자를 포함한 시민대표는 미국으로 건너가 피폭 체험을 전했는데 그 수가 제1회는 500명, 제2회는 1,300명에 달했다. 한편 뉴욕 군축 특별총회에 참석한 이실근은 ‘일본 국민대표단’의 읍저버로 독자적 활동을 수행했다. 현지에서 기자회견으로 조선인 피폭자의 존재와 실태를 전 세계에 처음으로 알렸다. 이때의 실태자료는 일본 정부의 범죄성과 함께 원폭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松浦一 1978, 1).

조피협회의 핵무기 폐기 및 평화운동의 전개는 1978년 10월 17일, 조선인 피폭자 최초의 ‘핵 의식’에 대한 조사·협력으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조선인 피폭자의 핵 의식에서 평화 지향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일본 시민보다 더 핵실험에 대한 전면금지 요구가 높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부정적 답변도 더 높았다. 또한 피해자 원호라든가 피폭2세 문제 등에 관심이 높았고, 핵무기 폐기운동 혹은 평화교육 등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곧 조선인 피폭자의 평화 지향성이 보다 부각됐다(中国新聞 1978/10/17; 小寺初世子 1979, 27). 이런 높은 평화 지향성은 실제 히로시마 반핵 집회에 조선인 피폭자가 수백 명씩 참여하는 데서도 잘 나타났다(中国新聞 1982/03/18). 특히 조선인 여성은 일본 여성운동과 교류해, ‘아시아·태평양지역 비핵화를 향한 반핵·군축·지구를 지키는 여성 집회’라는 대규모 히로시마 국제포럼의 개최를 성사시켜, 반핵·평화운동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ひろしま女性学研究所 2016, 144).

‘제2차 냉전’이라 불리는 1979년부터 1980년대 전반기, 미·소의 군사적 대결 및 재무장이라는 ‘핵 위기’ 속에서 유럽은 고조된 국제적 긴장과 내부 갈등 국면에 처했고, 이에 유럽의 반핵·평화운동은 세계를 휩쓸 정도로 대중적으로 고조됐다(이동기 2015, 43-50). 세계적 반핵운동의 열기 속에서 1983년 10월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반대하는 독일평화단체, 재독한인단체, 유럽의 일본인 시민단체 등의 초대로 이실근은 유럽의 평화운동에도 참여한다. 원래는 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스위스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비자 문제로 결국 독일 방문만이 실현됐다(李実根 1984, 7-14; *Journal OH-JAPAN* 1983, 8-9). 이실근은 독일의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문제는 일본 군국주의와 조선의 식민지화, 그리고 아시아 침략전쟁과 떨어질 수 없는 문제로 희생자는 일본인

만이 아니라 다수의 외국인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호소했다. 그리고 나카소네 정권의 군비확대와 우경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위험성, 그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고조 상황을 전했다. 특히 본에서 개최된 미국의 전략 핵 배치에 반대하는 수십만 규모의 집회에 참여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왜 다수의 조선인 피폭자가 존재했는가를 유럽인에게 발신하고, 핵무기는 국적·민족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살상하는 비인도적 무기라고 비판했다. 귀국 후에는 보고회를 열어 국제평화운동의 동향을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전했다(中国新聞 1983/09/06; 09/13; 10/10; 11/09; *Journal OF JAPAN* 1983, 8-9).

그밖에 미국 내 대학과 피폭자 단체와도 교류하며, 피폭자 국제회의에 참가해 조선인 피폭자 실태 등을 보고하고 원폭 투하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핵무기 폐기를 호소했다(中国新聞 1984/10/09; 10/19). 또한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UN본부에서 열린 UN 인권위원회에 참석해, 조선인 피폭자, 군인·군속 피해자 문제를 인권위에 상정시킬 것을 호소했다(1994.4). 여기서도 원폭 피해와 제국주의·식민지 문제와의 관련성을 주장했다. 또한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 피폭자에게 어떤 지원과 대책도 수립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며, 원폭 피해 손해배상 요망서를 미 대사관에 제출했다(中国新聞 1994/04/13; 04/19; 04/20; 04/28; 05/10).

4) 북한 원폭 피해자 지원활동

조피협은 1965년에 결성된 원수금과 연계해 ‘재외 피폭자 원호’ 활동

을 해왔다. 특히 북한 피폭자 운동과의 교류와 지원 활동은 특기할 만하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북한 피폭자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平野伸人 2009, 88-93; 田村和之 2016, 289). 일본에서 북한의 피폭자 지원활동은 민간지원 단체만이 도모해왔을 뿐이다. 일찍이 1949년 개최된 ‘세계 평화 옹호 대회’를 계기로 북한은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위원회(위원장, 한설야)’를 결성해, 북일 간 평화운동단체의 교류를 추진하고, 재일 조선인운동에 힘입어 ‘조일 인민연대’를 실현했다. 이른바 오야마 사절단, 구로다 방북단으로 상징되는 북일 간 최초 만남이자 민간 차원의 북일 교류의 시작 이래로 북일 평화운동단체의 교류는 이후 국제 정세 변화의 영향으로 난관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꾸준한 교류가 계속됐다(박정진 2010, 114-116). 그런 조일 평화운동 교류의 한축이 조피협이었다. 동 단체는 일본의 민간지원 단체와 함께 북한 피폭자를 일본 사회에 소개하며 북일 원폭 피해자운동의 교류 및 지원활동을 수행해왔다. 이를 세 단계로 나눠 살펴보겠다.

첫째, 1981년 7월 일본 주코쿠·시코쿠(中国·四国) 지방의 일본 학자들이 북한을 방문하고(中国新聞 1981/07/04), 동년 9월 일본 사회당 ‘조선문제 대책 특별위원회’의 북한 방문단이 조선노동당 간부들과 교류를 시작했다(中国新聞 1981/09/18). 하지만 본격적인 교류는 약 10년 후, 원수급 대표와 북한 방문단이 북한을 방문하면서였다. 당시 북한 피폭자의 실태는 파악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방문 후 ‘일조 피폭자회’(1991.9.21)가 설립됐다(中国新聞 1991/09/18; 09/22).

이듬해 1992년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북한의 박문숙(朴文淑)이 나가

사키 원수금 대회에 참석한다. 그녀는 원수금의 노력으로 하루 만에 원폭 수첩을 취득, 북한 유일의 원폭 수첩 취득자가 됐다. 이후 그녀는 북한의 ‘반핵 평화를 위한 조선 피폭자 협회(1995. 이하 조선 피폭자 협회)’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中国新聞 1995/02/02). 한편 1995년 11월 조피협은 최초로 북한 방문단을 꾸려 이실근 포함 5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때 북한 피폭자가 298명으로 밝혀졌다(中国新聞 1995/11/02; 11/28). 1996년에도 조피협은 히로시마 원수금, 현피단협, 노조회의 등으로 조직된 대표단을 대동해 북한을 방문, 피해자 실태를 조사했다(생존 피폭자 475명). 귀국 후 일본 방문단은 정부 당국에게 원조를 요청하지만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진전을 도모할 수는 없었다(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2009, 37-42).

둘째, 북한 조선 피폭자 협회가 1997년 피폭자 교류를 목적으로 히로시마·나가사키를 방문했는데, 피폭자 교류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방일이었다. 하지만 피폭자 지원 문제는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일본 측에 평양 ‘원폭 사진전’의 개최를 요청, 마침내 1999년 8월에 사진전이 개최됐다(中国新聞 1999/05/20;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2009, 37-42). 사진전은 북한 피폭자 문제의 심각성을 일본 정부에 재인식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사진전을 전후로 일본 정부는 북한 피폭자에 관심을 갖고, 조선피폭자협회 대표단과 대담도 했지만(中国新聞 2000/03/02), 오부치 총리의 급서 등으로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01년 정부 차원에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의료시설 등을 시찰했다(2000년 말 현재, 조선 피폭자 협회 등록자 1,353명, 생존자

928명)(中国新聞 2001/03/09;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2009). 신타 파악 후 원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성사된 정부 시찰이었지만, 북일 관계 악화를 핑계로 일본 정부는 약속을 불이행했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 이후 북일 관계는 다시 진전되는 듯 했지만, 납치·미사일·핵실험 등을 계기로 급속히 악화됐다. 하지만 재외 피폭자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불충분하나마 일본 정부는 일부 정책을 변경한다. 그래서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로 인정하는 정책의 진전을 보이지만 북한 피폭자만큼은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원호도 못 받고 방치됐다(中国新聞 2002/08/31; 伊藤孝司 2010, 3-16). 원수금은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매년 북한 피폭자의 초대를 의뢰했고 2006년 북한 방문단 파견을 재결정하지만 그해 북한의 핵실험 개시로 방문을 연기했다. 이후 북한 비핵화 협의가 진행되자, 2007년 북한을 재방문했다(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2009, 40-41).

셋째, 일본 민간 차원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북한 피폭자의 교류와 지원 활동의 형성이다. 이는 두 방향에서 전개됐다. 하나는 2007년 도쿄에서 ‘재조 피폭자 지원연락회(이하 지원연락회)’의 결성이었다. 동 단체는 조선 피폭자 협회가 수행한 북한 피폭자의 신타조사 결과를 정부, 각 정당 등에 보고하며, 북한 피폭자 지원활동을 수행했다(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2009, 41). 조선 피폭자 협회는 2008년 북한 피폭자 신타조사의 결과를 일본 측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2007년 말 현재, 북한 피폭자는 1,911명으로 확인됐다. 그중 80%인 1,529명이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는 382명이었다. 이 결과를 지원연락회가 일본 후생노동성에 전

하고, 신속한 원호조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교가 없다’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2009, 41). 2008년 지원연락회는 북한 피폭자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동년 6월 다시 북한에 방문단을 파견해 북한 피폭자의 피해 조사 내용을 확인했다.

또 다른 하나는 ‘히로시마현 의사회(이하 의사회)’의 의료 지원이었다. 의사회는 북·남미의 일본인 피폭자인 재외 피폭자의 의료지원을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왔다. ‘핵전쟁 방지 국제 의사회의(IPPNW)’ 북한 대표단은 IPPNW의 일본 지부장이기도 한 의사회의 회장과 2007년 몽골의 ‘IPPNW’ 북아시아 지역 회의에서 만나 교류했다(이실근 소장자료). 한편 2008년 의사회 이사 1명이 평양에 파견되고, 동년 의사회 9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들은 피폭자, 조선 피폭자 협회, ‘반핵 평화를 위한 의사 협회’와 만나 의견을 교환했고, 피폭자 치료기관인 ‘김만유 병원’을 시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2009년 북 핵실험으로 멈추고 만다. 2011년 10월, 의사회는 북한을 재방문하고 10명의 피폭자와 면담했다(朝鮮新報 2011/10/19). 2008년 9월 이래 3년 만에 성사된 2번째 방문이었다. 의사회는 12년 8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제20차 핵전쟁 방지 국제 의사회의 세계대회’에 북한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일본의 입국 허가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다(広島県朝鮮人被爆者協議会 2015).

4. 맺으며

이상으로 조피협이 결성 과정과 ‘피폭자 구제’와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전개한 동 단체의 활동을 원수폭 금지운동과 관련시켜 시대적 상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975년 8월 2일, 재일 조선인 최초의 원폭 피해자 운동단체로 조직된 조피협이 결성 배경에는 1950~1970년대를 거치면서 보다 열악해진 조선인의 삶의 변화와 일본 사회의 강한 배외주의, 그리고 1955년 이후 히로시마에서 고조된 원수폭 금지운동과 1960~1970년대 손진두 수첩 재판을 통해 각성된 일본 시민단체의 식민 지배와 전쟁 책임에 대한 가해성의 자각이 있었다.

조피협은 결성 후 원수폭 금지운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전쟁 책임을 물으며 조선인 피폭자의 실태를 밝혀 조선인 피폭자 운동을 처음으로 전 세계 반전·반핵·평화운동 안에 자리매김했다. 또한 일본과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못 받는 북한 피폭자의 원호 문제까지 포괄하며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조피협은 전후 일본 평화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의 다양한 법적 제약 하에서 작동되던 조선인 피폭자에 대한 실천 구조의 난제를 폭로한 동시에 그것을 전 세계 시민과 함께 원수폭 금지운동으로 해결해가며 민주주의의 성과를 수호한 마치 호민관과도 같은 성격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동 단체는 “어떠한 나라”의 핵무기도 거부한다는 원칙의 철저함이 불완전한 데서 유래한 일본의 원수폭 금지운동의 혼란과 분열을

조선인 피폭자의 존재 자체와 반핵·평화운동으로 불식시켜, “진실로 원수폭 금지운동은 원수폭 금지라는 민주주의적인 요구에 근거해 결집한, 세계 각국 민중의 힘에 기초해야 한다”는 한 일본 원수협 대표의 성찰처럼, “핵실험에 대한 투쟁의 궁극적인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고 핵무기를 부정하는 강고한 의지와 실천 의욕이며, 현재로부터 미래에 걸친 인류 역사에 관한 엄격한 책임감”이라는 원수폭 금지운동의 핵심 이념을 적극 실천했다.

올해는 원폭 피폭 73년 되는 해이다. 그동안 조선인 피폭자는 일본의 평화운동에서 마저 오랫동안 소외되어왔다. 히로시마 조선인 피폭자가 처음 일본 미디어에 보도된 때는 1965년이며, 히로시마시 주최, 평화기념식에 조선인 대표가 처음으로 초대되어 참석한 때는 1970년이다. 그리고 원폭 투하로부터 40년이 지난 1975년이 되서야 최초의 조선인 피폭자 평화운동 단체, 조피협이 결성됐다. 그로부터 또 40여 년이 흐른 지금 조피협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소개됐다. 이런 시간적 지체야말로 제일 조선인 그리고 조선인 피폭자가 벌인 고투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2018년, 현재 세계는 다시 한 번 ‘신 냉전’의 소용돌이에서 ‘핵 위기’ 곧 재무장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핵개발과 핵무기 경쟁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히로시마 조선인과 조피협이 수행해온 역사적 평화운동은 핵무기의 힘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를 성찰로 이끈다. 바로 윤리적인 인간적 힘만이 현재의 세계 위기를 고발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일 것이다. ~~다~~

참고문헌

- 권혁태. 2012. “국경 안에서 탈/국경을 상상하는 법: 일본의 베트남 반전운동과 탈영병사.” 『동방학지』 157. 113-166.
- 김원. 2017. “밀항, 국경 그리고 국적.” 『한국민족문화』 62. 245-304.
- 대일항쟁기동원피해조사및국외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대일항쟁강동위). 2011. 『히로시마·나가사키 조선인 원폭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를 중심으로』. 위원회진상조사보고서.
- 도노무라 마사루. 2010.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 미즈모토 가즈미(水本和美). 2005. “히로시마의 평화인권운동: 군사도시에서 평화도시로.” 『4·3과 역사』. 161-176.
- 박정진. 2011. “북한의 대일접근과 재일조선인 ‘복송(귀국)문제.’” 『북한연구학회보』 15/1. 219-246.
- _____. 2010. “‘일조협회’의 결성과 ‘일조우호운동’의 태동.” 『국제정치논총』 51(2). 11-133.
- 서동주. 2015. “‘전후’와 폭력: 한국전쟁, 기지, 원자력.” 『日本研究』 24. 273-300.
- 오은정. 2013. “한국원폭피해자의 일본 히바쿠사(被爆者) 되기.” 서울대학교 인류학 박사학위논문.
- 이동기. 2015. “유럽 냉전의 개요-‘탈냉전’의 관점에서.”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 사회평론. 1-50.
-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2003. 『한국의 히로시마』. 역사비평사.
- 藤原修. 2014. “日本の平和運動-思想・構造・機能.” 『国際政治』 第175号. 84-99.
- _____. 2010. “原水爆禁止運動の分裂をめぐって: 安部一成の平和運動論.” 『現代法学』 19. 85-120.

- . 1991. 『原水爆禁止運動の成立』, 明治学院国際平和研究所.
- 朴寿南, 1973. 『朝鮮・ヒロシマ・半日本人: わたしの旅の記録』, 三省堂.
- 本岡拓哉, 2012. “戦後, 集団移住へ向けた河川敷の居住者の連帯-広島・太田川放水路の沿いの在日朝鮮人集注地区を事例に.” 『社会科学』 45/3, 25-53.
- 本田邦広, 1971. “朝鮮人被爆者は無視されている: “二重のケロイド”の痛み,” 『エコノミスト』 8/31, 84-89.
- ‘サンナムルを採りに-他郷に生きて’編集委員会(‘サンナムル’編集委員会), 2000. 『サンナムルを採りに-他郷に生きて』, 広島同胞生活相談センター.
- 上原敏子, 1978. “広島朝鮮人被爆者: 消えた相生通り,” 『季刊 三千里』 15, 175-179.
- . 1972. “在広朝鮮人被爆者についての一考察(一).” 『芸備地方史研究』 90, 11-17.
- 小林良江, 2013. “日本において反核運動に対する一考察,” 『群馬県立女子大学紀要』 34, 113-123.
- 小寺初世子, 1979. “在日外国人在広朝鮮人・韓国人被爆者の核意識,” 『広島女子大学文学部紀要』, 19-42.
- 松浦一, 1978. “朝鮮人被爆者に対する日・米の戦争犯罪を告発する,” 『人権と民族』 11, 1.
- 安部一成, 1963. “地域と中央: 原水禁運動の中から,” 『世界』 8, 58-63.
- 梁東淑, 2015. “朝鮮人原爆被害者関連の研究状況と李実根(イ・シルゲン)(「広島県朝鮮人被爆者協議会」)所蔵資料,” 『グローバル人間学紀要』 第7号, 73-94.
- 宇吹暁, 1982. “日本において原水爆禁止運動の出発: 1954年の署名運動を中心に,” 『広島平和科学』 5巻, 199-223.
-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 2005. 『ドキュメント核兵器のない世界へー被爆60年と原水爆禁止運動 1945~2005』, 原水爆禁止日本協議会.
- 原水爆禁止日本国民会議, 2009. 『放置された在朝被爆者: 現状と課題』, 原水爆禁止

日本国民会議.

栗原貞子. 1978. 『核・天皇・被爆者』. 三一書房.

李実根. 2006. 『PRIDE 共生への道: 私とヒロシマ』. 汐文社(양동숙 외. 2015. 『나의 히로시마: 공생의 길, 평화의 길』. 논형)

_____. 1984. “歴史的反省踏まえた西独平和運動.” 『ヨーロッパ反核83秋-84春: ヨーロッパ反核運動から何を学ぶか?』. 7-14.

_____. 1978. “朝鮮人被爆者の実態 ‘忘れられた人たち.’” 『人権と民族 11』. 4-16.

伊藤孝司. 2010. 『ヒロシマ・ピョンヤン: 棄てられた被爆者』. 風媒社.

李泳采. 2010. “戦後日朝関係の初期形成過程の分析在日朝鮮人帰国運動の展開過程を中心に.” 『立命館法学』 5・6号. 33-58.

日本ジャーナリスト会議広島支部編集委員会. 1978. “朝被協代表を国連軍縮特別総会の場へ.” 『広島ジャーナリスト』 78. JCJ広島支部事務局. 1-41.

日本平和委員会 編. 1969. 『平和運動20年史』. 大月書店.

在日本大韓民国家留民団. 1984. 『広島民団35年史』. 在日本大韓民国家留民団広島県地方本部.

Journal OH-JAPAN. 1983. 『おーJAPAN』 No.66. ウイーン事務局.

田村和之. 2016. 『在外被爆者裁判』. 信山社.

朱碩. 1990. 『被爆朝鮮人教師の戦後誌』. 明石書店.

中達啓示. 1993. “在韓被爆者問題-忘れられたもうひとつのひろシマ.” 『広島平和科学』 16. 1-40

中島竜美. 1974. “朝鮮人は被爆者ではないのか.” 『朝日ジャーナル』 1616. 85-88.

椎名麻紗枝. 1985. 『原爆犯罪: 被爆者はなぜ放置されたか』. 大月書店.

太陽. 1965. 『太陽』 30. 平凡社.

阪上史子. 2016. 『大竹から戦争が見える』. ひろしま女性学研究所.

平野伸人. 2009. 『海の向こうの被爆者たち: 在外被爆者問題の理解のために』. 八月

書店.

平岡敬. 1983. 『無援の海峡』. 影書房.

荒木誠之. 1975. “韓国人被爆者と原爆医療-被爆者手帳交付拒否事件判決をめぐる.”

『ジュリスト』. 64-67.

荒川恵子. 2008. “被爆国の逆説: 1957年から1963年: 日本の反核運動の盛衰.” 『一矯法学』 7(2). 593-650.

県北の現代史を調べる会編. 1989. 『戦時下広島県高暮ダムにおける: 朝鮮人強制労働の記録』.

広島・長崎朝鮮人被爆者實態調査團. 1979. 『朝鮮人被爆者の實態報告書』. 広島長崎朝鮮人被爆者實態調査團事務局.

広島市・長崎市原爆災害誌編集委員会編. 1979. 『広島市・長崎市の原爆災害』. 岩波書店.

広島県警察部編. 1955. 『広島県警察史(下)』. 警察協会島支部.

広島県朝鮮人被爆者協議会編(広島県朝被協編). 1979. 『白いチョゴリの被爆者』. 労働旬報社.

ひろしま女性学研究所. 2016. 『被爆70年ジェンダーフォーラム in 広島‘全記録’: ヒロシマという視座の可能性をひらく』. ひろしま女性学研究所.

자료

『中国新聞』.

『朝鮮新報』.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帰国者名簿 1959~1962.”

“被爆者代表から要望を聞く会會議録 1977~2005.”

広島県朝鮮人被爆者協議会. 1978. “広島朝鮮人原爆被害者名簿.”

‘広島同胞愛国運動의 발자취’ 刊行期成会. 2000. “広島同胞愛国運動 발자취.”(연표)

- 広島県朝鮮人被爆者協議会. 2015. “広島県朝鮮人被爆者協議会40年の歩み.”(연표)
- 日本辯護士聯合会. 2006. “シンポジウム在外被爆者問題を考える: 被爆60年の到達点と残された課題.”
- 松嶋博孝. 2017. “広島市・長崎市の原爆災害(1979年岩波書店発行)の朝鮮半島の出身被爆者死亡数についての資料.”(2017.9.22. 답변서)

Abstract

The Formation of ‘Hiroshima Prefecture Korean Victims of an Atomic Air Raid Council’ and a Nuclear Bomb Ban Campaign

Yang, Dong Sook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mation and activities of the ‘Hiroshima prefecture Korean Victims of an Atomic Air Raid Council’ in relation to the nuclear bomb ban campaign, and through this, to identify the context in which Japanese Korean A-bomb Victims were able to carry out the activities of the A-bomb survivors relief and disposal of nuclear weapons after post war.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the ‘Hiroshima prefecture Korean Victims of an Atomic Air Raid Council’, which was formed by Japanese Korean A-bomb as the first organization, was based on the changes of the lives of Japanese Korean who became poorer during the 1950s and 1970s, and the strong externalism in Japanese society. It heightened the nuclear bomb ban campaign in Hiroshima after 1955, and the awareness of the responsibility in Japanese civil society for the colonialism that was awakened from the hibakusha techo trial in case of Sohn-Jindu accident in 1960s and 1970s.

After formation of ‘Hiroshima prefecture Korean Victims of an Atomic Air Raid Council’, they shared the goal of the nuclear bomb ban

campaign. They identified the real condition of the Japanese Korean A-bomb Victims and located them in the anti-nuclear disarmament peace movement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It also covered the issue of the North Korean A-bomb Victims who are not receiving any support from Japan in term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The activities of the ‘Hiroshima prefecture Korean Victims of an Atomic Air Raid Council’ were the exposure to the difficult issues under the democratic system. It was also the activity that strictly adhered to the principle of the the nuclear bomb ban campaign, which rejected the nuclear weapons of any country.

■ **Keyword:** Hiroshima Prefecture Korean Victims of an Atomic Air Raid Council(=Hiroshima-ken Chōsenjin Hibakusha Kyōgikai), Nuclear Bomb Ban Campaign, Japanese Korean A-bomb Victims, North of Korean A-bomb Victims, Lee Silkeun

투고 : 2018/3/31 심사 : 2018/4/11 확정 : 2018/5/9